

# 정부 “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 피해자 지원도 보완

### 전세사기 단속 연말 종료 예정→‘무기한’ 수원 전세사기에 검경 엄중 수사 예고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속히”

정부 전세사기 단속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무기한으로 연장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속히 하는 등 지원방안도 다듬을 계획이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정부 전국 특별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수원 지역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수원지검에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경찰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 수사를 약속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있고, 검·경 수사협의제도 활동 중이다. 수사 기간도 세모너 사건(경찰 9개월·검

찰 6개월)과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경찰 3개월·검찰 1개월) 비교를 통해 나타나 듯 단속했다.

검찰은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범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다.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주범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물 사건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의원 입법)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피해금

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처벌 대상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보전한 금액도 1163억5000만원(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5억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11배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범죄수의 환수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7590건을 결정했고,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국토부는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하여 전세피해 상담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 지원 강화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변용일기자



전국 민방위 훈련 화재 진압

전국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1일 오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감사 착수

### 오는 30일까지 특정감사 착수... 감사원 감사 청구도 검토

고용노동부가 1일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금 부정 지급 문제와 관련해 산하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이른바 ‘근로복지공단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특정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 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등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뒀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다.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

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할 것”이라며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환자는 7만1000명으로, 이들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에는 2005년 관절 염좌로 6개월을 입원한 뒤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 9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2021년 팔꿈치 부상으로 73일을 입원한 뒤 3년차 요

양을 하고 있는 사례 등도 있었다.

이 의원은 환노위 국감에서 “충분히 치료하고 요양하면 나올 수 있는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공단 측에서 기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을 넘어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산재 보상금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상식과 정의, 공정에 크게 어긋나므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적된 문제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며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권기자

## “헤어지자 하지 마” 여친 갈비뼈 부러뜨린 30대, 2심 형량 ↑

### 징역 1년 4개월 선고

여자친구를 깨진 유리로 위협하거나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협박,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다툼 뒤 화해를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의 자택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 B씨의 목살·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뒤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배란다 창문을 깨뜨린 뒤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마”라며 깨진 유리

조각으로 B씨를 위협하다 굽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 9일 음주 문제로 다툼된 B씨에게 주먹질한 뒤 바로 B씨의 갈비뼈를 밟아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유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